

전송권 문제로 도서관과 전자책 업체 갈등 깊어져

현실성 있는 예산 배정 및 책의 공공성 지켜야

지난 4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 전자책 업체는 전자책 구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전송권이 허용된 현행 저작권법 안에서 전송권 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로 빚어진 갈등이었다. 문화관광부는 전송권 허용 범위를 해당도서관으로 한정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국립도서관측의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와 업계의 공공성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7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측은 전자책 업계 대표들과 만나 전자책 구매에 대한 도서관 입장을 설명했다. 국립중앙도서관측은 이날 그동안의 전자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설명하고 구매 규모를 업계와 논의했다. 잠정적으로 전체 20억원이 배정된 구매예산 가운데 전자책 구매액은 2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나머지는 웹DB, 학회지 등을 구매하는 데 배정됐다.

전송권 허용 범위 규정이 갈등 불러와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과 전자책 업체는 이 문제로 적지 않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4월 국립중앙도서관측은 드림북, 바로북닷컴, 북토피아 등 12개 콘텐츠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는데, 업체별로 제시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측은 공인된 원가계상업체에 가격기준평가를 의뢰한 바 있다. 그 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 1권을 10카피 가격으로 일괄 구매해 전국 403개 도서관에 동시에 무료로 배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최초 업계의 주장은 403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만큼 403카피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업계는 일괄구매방식을 개선해달라고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요구했다. 403개 공공도서관에 일괄 서비스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해 각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전자책 납품 희망 리스트를 제출받아 구매의사를 표시한 공공도서관의 수만큼 카피수를 구

매해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업계의 반발과 건의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숙현 과장은 “전자책 가격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체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10카피나 40카피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는 어떤 방침도 내린 바 없다”고 밝히고 “최종결정은 조달청 입찰에서 내려질 것이다. 최종 가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업체는 납품하지 않으면 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갈등을 빚은 근본 원인은 현행 저작권법에 있다. 저작권법은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저작권법 28조 2항)도록 규정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전자책 업체 간에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전송권 문제다. 국립중앙도서관측은 전자책을 구입할 때 업계로부터 전송권까지 다 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송권까지 다 산다’는 도서관측의 주장은 물론 전국 공공도서관 403개의 전송권을 다 산다는 말이 아니다. 403이라는 수도 도서관 한곳에 설치된 단말기수를 1대라고 가정하고 산출한 것이다. 이에 맞서 전자책 업체측은 403카피만이라도 다 사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한발 물러섰다. 지난 7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과 업계가 만난 자리에서는 40카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더 정확한 가격과 카피수는 조달청 입찰을 거쳐야 드러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문화관광부도 저작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의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에서 전송권의 범위를 ‘당해 시설’로만 한정짓는 것이다. 즉, 중앙국립도서관의 전자책이나 웹DB 원본서비스는 중앙국립도서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개정안은 내년어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 평가로 전자책 구매 예산 낮게 배정해

본래 국립중앙도서관측의 전자책 구매 예산은 2억원보다 훨씬 적은 280만원이었다는 게 바로북닷컴 이상훈 사장의 설명이다. 이사장은 “3천~5천원 정도의 가격인 전자책은 40카피로 구매하면서, 1천만원 이상인 웹DB와 학회지 구입 예산은 전체 예산의 90%로 상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입하려는 웹DB와 학회지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무료로 서비스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책 구입에 소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숙현 과장은 “자체 평가 과정에서 품질이나 이용가능성 면에서 전자책보다는 웹DB와 학회지가 높게 평가된 결과”라며 전자책에 배정된 2억원에서 더 적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번 갈등은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화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웹DB, 전자책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시대에 맞는 법 개정과 함께 현실성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도서관은 업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정한 선정과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업계 또한 도서관 납품의 공공성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장근 기자